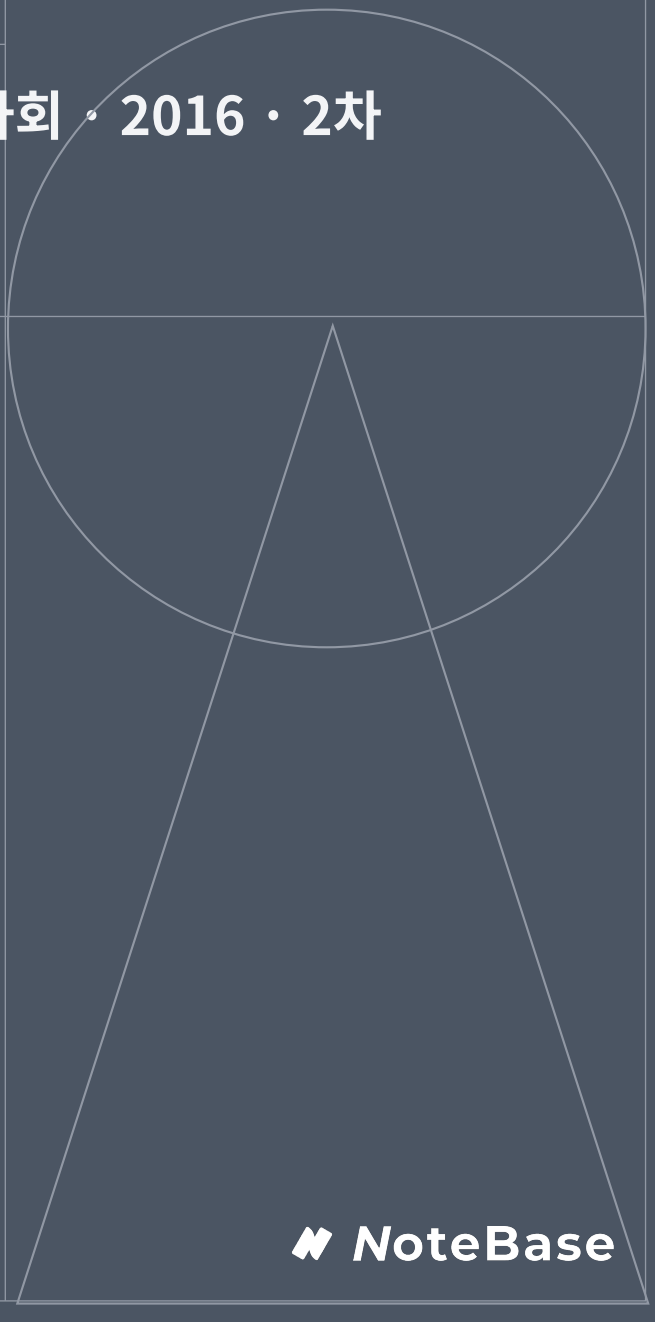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6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6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6 · 2차

문 1.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수명이 길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를 '하루에 열 사람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①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② 자료를 수치화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주로 사용된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만들어 계량화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④ 연구의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추상적 개념을 관찰·측정 가능한 구체적 기준으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의 의미와 활용을 묻는다.

핵심 개념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실제 조사에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다. <보기>는 '사교적인 사람'을 '하루에 열 사람 이상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사교성을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바꾸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조작적 정의의 특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추상적 개념을 객관적으로 관찰·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로 정의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수치화하고 측정할 수 있게 하므로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③ O —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바꾸어 계량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조작적 정의의 정확한 설명이다.
④ O — 조작적 정의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 정하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직관적 통찰'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조작적 정의의 핵심은 연구자의 직관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관찰·측정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상적인 말 뒤에 횟수, 시간, 점수, 빈도처럼 실제로 측정 가능한 기준이 제시되면 조작적 정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NoteBase

문 2. 다음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지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로 결정된다.

②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고 소속감 또한 강하지만 계층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③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

④ 계급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급과 계층이 사회 불평등을 구분하고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구분하며, 두 계급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계층은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권력과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연속적·서열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계급과 계층은 모두 사회에 구조화된 불평등이 존재함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지만, 계층은 경제적 자원·정치적 권력·사회적 지위 등 복수의 요인으로 결정된다.
② O.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대립적 범주로 비교적 명료하게 나뉘고 계급의식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계층은 경계가 연속적이어서 구분과 소속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O. 계급 관계는 생산수단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대립적으로 파악되지만, 여러 계층의 관계가 언제나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④ X. 틀린 표현은 '계층은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올바르게는 계층도 경제적 자원·권력·지위 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나타나는 서열적 관계와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계층의 구분 기준이 다양하다는 점을 집단 간 관계가 평등하다는 뜻으로 바꾸어 놓았다. 계층의 경계가 계급보다 덜 명확하더라도 계층 자체는 불평등한 서열을 나타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수단 소유 여부와 대립은 계급, 경제력·권력·지위의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열은 계층으로 판단한다. 두 개념 모두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므로 계층을 평등한 관계로 규정한 선지는 틀린다.

암기 포인트

계급은 생산수단과 대립, 계층은 복합 기준과 서열이며, 둘 다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3. 다음은 자신의 일탈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주장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가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그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보기>
㉠ 일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칙으로 특정인을 낙인찍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
㉢ 특정 집단의 일탈행동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의 진정한 원인이다.
㉣ 일탈은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관점이 갈등 이론임을 파악하고, 이를 낙인 이론 및 차별 교제 이론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갈등 이론: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피지배집단의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집단 간 갈등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 이론이다.
낙인 이론: 어떤 행위 자체의 속성보다 타인의 부정적 반응과 낙인이 일탈자라는 정체성과 이차적 일탈을 형성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차별 교제 이론: 일탈 집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탈의 방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하여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제시문은 법이 힘 있는 사람만 보호하고 힘없는 노점상을 거리로 내몬다고 주장하므로 권력관계와 사회 구조의 모순을 강조하는 갈등 이론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일탈로 규정한다는 갈등 이론의 설명이지만, ㉠의 '사람들이 규칙을 적용해 특정인을 낙인찍기 때문에 일탈이 생긴다'는 설명은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 틀린 조합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은 낙인 이론, ㉣은 일탈이 접촉과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차별 교제 이론의 설명이므로 둘 다 제시문의 갈등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틀린 조합 '㉠, ㉣'은 'ㄴ, ㉢'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은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의 행위를 일탈로 규정한다는 권력관계를, ㉢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 일탈을 낳는다는 원인을 강조한다. 두 진술 모두 갈등 이론에 부합한다.
④ X — ㉢은 갈등 이론에 부합하지만, ㉣의 '접촉과 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의 핵심 표현이다. 틀린 조합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규칙'이라는 말만 보고 지배집단의 규칙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결정적인 표현은 '낙인찍었기 때문에'이다. 이는 갈등 이론이 아니라 낙인 이론의 단서이다. 또한 ㉣의 '접촉과 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의 고유한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배집단·피지배집단, 권력,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보이면 갈등 이론으로 판단한다. '낙인·사회적 반응'은 낙인 이론, '접촉·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권력과 구조는 갈등, 낙인은 낙인, 접촉과 학습은 차별 교제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빈곤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다.

②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③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④ 경제 발전에 따라 평균적 빈곤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적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빈곤의 원인에 관한 관점과 절대적 빈곤·상대적 빈곤의 측정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빈곤 원인에 관한 개인적 관점은 개인의 능력·태도·행동 등에서 원인을 찾고, 사회 구조적 관점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나 제한된 기회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과 같은 상대적 기준으로 파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는 관점과 불평등한 분배 구조·기회 부족 같은 사회 구조에서 찾는 관점이 모두 존재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절대적 빈곤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이다.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은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이고,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자원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O —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최소 생계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한 격차와 배제 문제가 중요해지므로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된다.
④ O — 경제 발전으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소 생활 수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대적 빈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절대적 빈곤의 측정 기준으로 바꾸어 놓았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이름이 아니라 측정 기준을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소한의 생계 유지 여부를 묻는다면 절대적 빈곤, 그 사회의 중위 소득이나 일반적 생활 수준과의 비교를 묻는다면 상대적 빈곤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적 빈곤은 최소 생활 기준, 상대적 빈곤은 중위 소득 등 사회 내부의 비교 기준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 집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외의 다른 요소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선발되었다는 의혹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②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공천제, 장애인 고용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적극적 우대 조치가 개인의 인식 개선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려는 접근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과거부터 누적된 차별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채용·교육·정치 참여 등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이다. 개인의 편견이나 의식을 바꾸는 접근과 달리, 할당이나 목표 설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보기의 정책은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 접근이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과거의 지속적·구조적 차별로 누적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O — 특정 집단에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므로 다수 집단 구성원에게 불공정하다는 역차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비판과도 일치한다.
④ O — 여성 후보자 추천 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과소대표 집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의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에서 편견, 의혹, 낙인 같은 의식의 문제가 언급되므로 ①을 개인의 의식 개선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정책의 작동 수단은 일정 비율의 의무 고용이라는 제도이므로 개인적 접근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할당제, 채용목표제, 우선 선발처럼 집단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적극적 우대 조치로 판단한다. 편견 해소 교육이나 인식 개선처럼 개인의 태도를 바꾸는 방식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적극적 우대 조치 = 누적된 차별의 시정 + 실질적 평등 + 제도적 기회 보장이다.

NoteBase

문 6. 관료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② 업무의 표준화와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지만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임기가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별하고, 목적 전치가 규칙을 무시하는 현상이 아니라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현상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료제는 명확한 위계, 전문화된 분업,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측 가능성·공정성·안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직성·창의성 저하·목적 전치·무사안일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목적 전치는 본래의 조직 목표보다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일 자체를 더 중시하여 수단이 목적처럼 바뀌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자의적인 판단을 줄여 공정성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높인다. 반면 획일적인 규칙 적용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목적 달성을 위해 규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목적 전치'이다. 목적 전치는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절차의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본래의 조직 목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③ O — 엄격한 위계는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만, 상층부나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조직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④ O — 임기 보장과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은 구성원의 신분과 경력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과와 무관하게 지위가 안정되면 소극적 업무 태도나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목적 전치'라는 용어는 제시했지만 그 방향을 반대로 설명한다. 목적 전치는 목적을 위해 규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래 목적을 놓치는 현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료제 선지는 먼저 규칙·위계·분업·신분 보장이라는 구조를 확인하고, 그것이 공정성·안정성이라는 순기능으로 이어지는지 또는 경직성·권력 집중·무사안일이라는 역기능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한다. '목적 전치'가 나오면 수단인 규칙이 목적처럼 변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목적 전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7. 다음 (가)~(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고령화의 진행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충효가 근본인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 출산율보다 고령화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버산업 관련 연구 기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기>
㉠ (가)는 새로운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 (나)는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
㉢ (다)는 탐구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라)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가 부족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필요한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객관적 태도, 성찰적 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방적 태도: 기존의 연구 결과나 통념도 비판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상대주의적 태도: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문화 현상을 그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
객관적 태도: 연구자의 이해관계나 주관적 가치가 탐구에 개입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태도이다.
성찰적 태도: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원인과 연구 과정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태도이다.

NoteBase

보기 판단

㉠ O: (가)는 기존 연구에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현상의 연관 가능성을 닫고 있으므로, 새로운 비판과 검증을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 O: (나)는 자신의 전통적 가치인 충효를 보편적 판단 기준처럼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벗어나 대상을 이해하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하다.
㉢ X: (다)는 소속 연구 기관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므로 객관적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탐구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객관적 태도가 부족하다'이다.
㉣ X: (라)는 두 현상 뒤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므로 성찰적 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옳은 평가인 ㉠과 ㉡만 묶은 선택지이다.
② X: ㉡은 옳지만 ㉢은 그르다. '㉡, ㉢'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③ X: ㉡은 옳지만 ㉣은 그르다. '㉡, ㉣'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④ X: ㉢과 ㉣이 모두 그르다. '㉢, ㉣'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다)가 사회 현상을 언급한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거나, (라)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다)의 '우리 연구 기관에게 바람직하다'에는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라)의 '더 근본적인 원인' 탐색은 성찰적 태도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존 결론을 절대시하면 개방성, 자기 문화의 기준을 보편화하면 상대주의, 이해관계를 판단에 섞으면 객관성, 표면적 현상 뒤의 원인을 되묻는지는 성찰성의 문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방은 비판 수용, 상대주의는 맥락 이해, 객관은 이해관계 배제, 성찰은 이면의 원인 탐색이다.

NoteBase

문 8.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안 모 씨는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부 과장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장님의 독촉 때문에 이번 주말도 부하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도 모두 반납하고 일해 온 부하 직원들은 안 과장에게 휴식을 요구한다. 한편 아내와 초등학생 딸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 작년에 약속했던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조른다.

① 안 모 씨는 부장님과 부하 직원 사이에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② 안 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
③ 안 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끼고 있다.
④ 안 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지위에서 요구받는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역할 갈등과, 하나의 지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상반된 역할을 기대하는 역할 긴장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안 모 씨는 회사에서는 부장의 야근 요구와 부하 직원들의 휴식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 또한 직원으로서는 주말에 일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아내와 딸과의 해외여행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개념

역할 갈등은 한 사람이 차지한 서로 다른 지위의 역할들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역할 긴장은 하나의 지위에 대하여 여러 역할 상대가 서로 상반된 기대를 제시하여 생기는 부담이다.

적용 기준

서로 다른 지위에서 비롯된 요구의 충돌이면 역할 갈등, 하나의 지위 안에서 상반된 역할 기대를 받으면 역할 긴장으로 판단한다. 같은 방향의 요구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안 모 씨는 과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서 부장의 야근 요구와 부하 직원들의 휴식 요구를 동시에 받는다. 같은 지위에 대한 상반된 기대이므로 역할 긴장에 해당한다.
② O —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행 약속을 지켜야 하는 역할과 직원으로서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역할이 충돌하므로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③ X —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아내와 딸은 모두 해외여행을 요구하므로 두 가족 역할의 기대는 같은 방향이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 서로 다른 역할 상대의 요구와 여러 지위의 역할을 조정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관용과 대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이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남편'과 '아빠'가 서로 다른 명칭이라는 점만 보고 곧바로 충돌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사례에서는 아내와 딸의 요구가 모두 해외여행으로 일치하므로 두 가족 역할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요구가 어느 지위에서 나오는지 구분한다. 서로 다른 지위의 역할이 충돌하면 역할 갈등, 하나의 지위에 대해 여러 상대의 기대가 충돌하면 역할 긴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러 지위끼리 충돌하면 역할 갈등, 한 지위 안의 기대가 충돌하면 역할 긴장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하나는? (단,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였다.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③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의 양이다. 달러 수요가 늘거나 달러 공급이 줄면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 수요가 줄거나 달러 공급이 늘면 환율이 하락한다.

핵심 개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달러 가치 상승을 뜻하고,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달러 가치 하락을 뜻한다. 외환시장에서 수입과 해외투자는 달러 수요를, 수출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달러 공급을 만든다.

선지별 해설

① X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금융자산의 상대적 수익성을 높여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한다.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이 선지를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② X —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달러 공급은 줄고 달러 수요는 늘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 선지를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③ O —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 해외로 지급하는 달러의 감소 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의 감소 폭보다 크다. 외환시장의 달러 순공급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나머지 선지와 환율 변화 방향이 다르다.

④ X — 국내 통화량 증가는 국내 이자율을 낮추고 원화 가치에 하락 압력을 준다. 자금의 해외 이동에 따른 달러 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이 선지를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수출 감소만 보면 달러 공급 감소에 따른 환율 상승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졌다는 비교가 핵심이다. 달러 수요의 감소 폭이 달러 공급의 감소 폭보다 커서 환율은 하락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요인이 달러 수요와 달러 공급 중 어느 쪽을 바꾸는지 먼저 구분한다. 달러 수요 증가·달러 공급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 수요 감소·달러 공급 증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한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변하면 각각의 방향뿐 아니라 변화 폭까지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미국 금리 상승·한국의 상대적 물가 상승·한국 통화량 증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발표한 인구 및 고용통계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40,000 명	32,000 명	12,000 명	21,000 명

① 이 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5%이다.

② 이 나라의 고용률은 52.5%이다.

③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이다.

④ 이 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8,000 명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인구·고용 자료에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한 뒤,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의 분모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전체 인구는 40,000명, 생산가능인구는 32,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2,000명, 취업자 수는 21,000명이다. 문항이 제시한 분류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28,000명이고,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7,000명이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인구 = 전체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각 지표는 분모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수치를 넣어 계산할 수 없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40,000명 - 12,000명 = 28,000명이다.
2. 실업자 수는 28,000명 - 21,000명 = 7,000명이다.
3.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28,000}{32,000} \times 100 = 87.5\%$이다.
4. 고용률은 $\frac{21,000}{32,000} \times 100 = 65.625\%$이다.
5. 실업률은 $\frac{7,000}{28,000} \times 100 = 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28,000}{32,000} \times 100 = 87.5\%$이므로 맞다.
② X. '고용률은 52.5%'가 틀렸다. 52.5%는 취업자 수 21,000명을 전체 인구 40,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률의 분모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이므로, 올바른 고용률은 $\frac{21,000}{32,000} \times 100 = 65.625\%$이다.
③ O. 실업자 수는 7,0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8,000명이므로 실업률은 $\frac{7,000}{28,000} \times 100 = 25\%$이다.
④ O. 문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 40,000명에서 비경제활동인구 12,000명을 뺀 28,000명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52.5%는 취업자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고용률은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분모를 생산가능인구 32,000명으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를 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각 선지의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참가율·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가 분모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가 분모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보기>의 국내 총생산(GDP) 계산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집값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면 GDP도 5천만 원이 증가한다.
㉡ 중간재 10억 원 어치가 수출되는 경우 GDP도 10억 원 증가한다.
㉢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다.
㉣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GDP에 포함되는 것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이다. 자산 가격의 단순 변동, 수출된 중간재, 재고 증가, 정부 서비스의 평가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집값의 단순 상승은 새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중간재는 외국의 구매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되므로 수출액으로 GDP에 포함된다.
㉢ 올해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은 자동차는 재고투자로 계산되므로 올해 GDP에 포함된다.
㉣ 공공 서비스는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공무원 보수 등 생산비용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 상승분은 GDP를 증가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 틀렸다. '집값이 5천만 원 상승하면 GDP도 5천만 원 증가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은 자산 가치의 변동일 뿐 당해 연도의 생산이 아니므로 GDP가 증가하지 않는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② X — ㉢이 틀렸다. '판매되지 않았다면 올해 GDP는 변함이 없다'는 표현은 잘못이며, 미판매 자동차는 재고투자로 처리되어 올해 GDP를 6천만 원 증가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③ O — ㉡과 ㉣은 모두 적절하다. 수출된 중간재 10억 원은 수출로 GDP에 포함되고, 공무원의 임금 상승분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비용 증가로 GDP에 반영된다.
④ X — ㉢이 틀리고 ㉡이 빠졌다. 미판매 자동차도 재고투자로 올해 GDP에 포함되며, 수출된 중간재도 수출액으로 GDP에 포함된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팔리지 않으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해 연도 생산물은 판매되지 않아도 재고투자로 잡힌다. 또한 중간재는 언제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 생산물에 투입될 때 중복 계산을 피하려고 제외하며, 해외로 수출되면 국내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당해 연도 국내 생산인지 확인한다. 새 생산이 아닌 자산 가격 변동은 제외하고, 생산 후 미판매분은 재고투자에, 수출품은 수출에, 시장가격이 없는 정부 서비스는 생산비용에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집값 상승은 제외, 미판매 생산품은 재고, 수출 중간재는 수출, 공공 서비스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2.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②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을 갖는다.

③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④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의 국세·지방세 및 직접세·간접세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납세의무자·담세자의 일치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세금의 경제적 부담을 실제로 지는 사람이다. 직접세는 두 주체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간접세는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어 두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다.

핵심 구분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기본법상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주세·증권거래세는 국세에 속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에 포함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도세에 해당하며, 특별시·광역시에서는 특별시세·광역시세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담 방식으로 보면 소득세·법인세는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주세·증권거래세는 간접세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주세는 국세이지만 도축세는 국세가 아니다. 도축세는 과거 지방세였으며 현재는 폐지된 세목이다.
틀린 표현: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
올바른 표현: '주세는 국세이고, 도축세는 과거 지방세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② O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액에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 비율이 커지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③ X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지만 지방교육세는 도세이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지방교육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에 속하므로 두 세목을 모두 시·군세라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시군세'
올바른 표현: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고, 지방교육세는 도세이다.'

④ X
법인세는 직접세이지만 증권거래세는 간접세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 세금 모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올바른 표현: '법인세는 직접세이고,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지방소득세의 분류를 지방교육세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이지만 지방교육세는 도세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④는 두 세금이 모두 국세라는 사실을 두 세금이 모두 직접세라는 주장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부과 주체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눈다. 다음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소득 대비 세 부담 비율이 소득 증가에 따라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보아 누진적·역진적 성격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세·법인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주세·증권거래세는 간접세이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 지방교육세는 도세이다.

NoteBase

문 13.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상되는 경제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축이 늘어난다.

②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③ 수출이 줄어든다.

④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저축, 소비·투자, 환율과 수출, 국제 자본 이동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정하는 정책금리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는 상승하고 차입 비용은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내 금리 상승은 원화 자산의 상대적 수익성을 높여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원화 가치 상승을 통해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금리가 오르면 현재 소비보다 저축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므로 저축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O — 금리 상승은 가계의 대출 부담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므로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O — 국내 금리 상승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이다. 올바르게는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원화 자산의 수익성이 높아져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답 포인트

금리 상승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자금 흐름이 국내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제 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므로 국내 금리 상승은 외국 자본의 유입 요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금리 상승의 효과는 '저축 유인 증가 → 소비·투자 감소'와 '국내 자산의 상대적 수익성 상승 → 외국 자본 유입 → 원화 가치 상승 → 수출 감소'의 두 경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금리 상승은 저축 증가, 소비·투자 감소, 자본 유입, 원화 가치 상승, 수출 감소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4.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과정에서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A	B
비배제성	C	D

①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② 케이블 방송은 B에 속할 것이다.

③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조합에 따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는 성질이다.
A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 재화이다. B는 배제성은 있으나 비경합적인 클럽재이다. C는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공유 자원이다. D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지닌 공공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정용 냉장고는 소유자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고, 한 냉장고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기 어려운 사적 재화이므로 A에 해당한다.
② O — 케이블 방송은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시청을 제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시청이 다른 사람의 시청 가능성을 보통 줄이지 않으므로 B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이다. C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공유 자원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은 감소한다.
④ O — D의 공공재는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하며, 시장을 통한 공급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C의 '비배제성'을 '비경합성'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C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는 비배제적이지만, 누군가 더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경합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용자를 막을 수 있는지로 배제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지로 경합성을 판단한다. 그 결과 A는 사적 재화, B는 클럽재, C는 공유 자원, D는 공공재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A 사적 재화는 배제·경합, B 클럽재는 배제·비경합, C 공유 자원은 비배제·경합, D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이다.

NoteBase

문 1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함수가 $QD = 3200 - 250P$이고 공급함수가 $QS = 1600 + 150P$이라고 할 때 균형거래량(Q)과 가격(P)을 각각 구하면?

① $Q = 2200,\ P = 2$

② $Q = 1600,\ P = 4$

③ $Q = 2200,\ P = 4$

④ $Q = 1600,\ P = 2$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시장균형 조건을 이용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_D = 3200 - 250P$, 공급함수는 $Q_S = 1600 + 150P$이다. 구해야 할 값은 $Q_D = Q_S$가 되는 가격 P와 그때의 거래량 Q이다.

사용할 공식

시장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다음 식을 사용한다.
$Q_D = Q_S$
따라서 $3200 - 250P = 1600 + 150P$로 놓는다.

계산 과정

균형가격을 먼저 계산한다.
$3200 - 250P = 1600 + 150P$
$1600 = 400P$
$P = 4$
이를 수요함수 또는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Q = 3200 - 250 \times 4 = 2200$
공급함수로도 $Q = 1600 + 150 \times 4 = 2200$이므로 균형거래량은 22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Q = 2200,\ P = 2$'에서 가격이 틀렸다. $P = 2$이면 수요량은 2700, 공급량은 1900으로 서로 같지 않다. 올바르게는 $Q = 2200,\ P = 4$이다.
② X — '$Q = 1600,\ P = 4$'에서 거래량이 틀렸다. $P = 4$를 대입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모두 2200이다. 올바르게는 $Q = 2200,\ P = 4$이다.
③ O — $P = 4$일 때 $Q_D = Q_S = 2200$이므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모두 정확히 나타낸다.
④ X — '$Q = 1600,\ P = 2$'는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틀렸다. $P = 2$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균형에서는 $P = 4, Q = 2200$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상수항이나 기울기만 보고 1600 또는 2를 고르면 안 된다. 먼저 $Q_D = Q_S$로 가격을 구한 뒤, 그 가격을 함수에 대입해 거래량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균형 문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기 → 균형가격 계산 → 가격을 한 함수에 대입해 균형거래량 계산 → 다른 함수로 검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균형의 핵심은 $Q_D = Q_S$이며, 가격을 먼저 구하고 거래량을 대입해 구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
㉡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회법의 법적 성격과 대표 영역인 노동법·사회 보장법·경제법의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법은 사적 자치에만 맡길 때 생기는 실질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하는 법 영역으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결합된 제3의 법 영역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제법은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지만 ㉠의 '사회법은 공법에 속한다'가 틀렸다. 사회법은 공법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결합된 제3의 법 영역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 ㉢이다.
② X — ㉠과 ㉣이 모두 틀렸다. ㉠은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결합된 제3의 법 영역이다'로, ㉣은 '경제법은 경제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과 ㉢이 모두 옳다. 노동법·사회 보장법·경제법은 사회법의 대표적인 종류이며, 노동법은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④ X — ㉡은 옳지만 ㉣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경제법의 목적은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 ㉢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법을 곧바로 공법으로 분류하거나, 경제법의 목적을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로 오해하기 쉽다. 국가 개입은 형식적 자유보다 실질적 평등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법 관련 선지는 '공법과 사법의 성격 결합',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 '경제력 남용 억제와 공정한 경제 질서'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결합,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와 실질적 대등, 경제법은 경제력 남용 억제와 공정 질서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국제법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은 단일하고 고유한 입법 기구나 집행 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②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③ 국제법은 국가 간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법의 형성 방식과 법원, 국제 규범의 국내법적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계인권선언 자체의 성격과 헌법상 국제법규의 효력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제법의 법원 = 국제법 규범이 성립하고 확인되는 근거이다. 대표적으로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핵심 구분

조약은 국가 사이의 명시적 합의를,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이를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만, 모든 국제 문서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은 UN 총회가 채택한 선언이므로 그 자체가 조약처럼 국내법에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사회에는 국내 국가와 같은 단일한 중앙 입법 기관이나 강제력을 독점하는 집행 기관이 없다. 따라서 국제법은 분권적인 구조에서 형성되고 집행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국제법의 법원에는 국제협약, 국제 관습, 법의 일반 원칙 등이 포함된다.

③ O
조약은 국가의 명시적 합의로 성립하고, 국제 관습법은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묵시적 합의를 토대로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④ X
세계인권선언은 UN 총회가 채택한 선언으로서 그 자체가 조약과 동일하게 국내법에 우선하는 규범은 아니다. 선언의 일부 내용이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선언 전체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틀린 표현: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올바른 표현: '세계인권선언은 국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며, 그 자체가 국내법에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세계인권선언의 높은 도덕적·정치적 권위와 국내법상 우선적 효력을 혼동하게 한다. 또한 헌법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 문서의 효력을 묻는 경우 먼저 조약인지 선언인지 구별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인지 국내법에 '우선'하는지 표현을 정확히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법의 주요 법원이고, 세계인권선언은 국내법에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조약이 아니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쟁의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① 직장폐쇄

② 피케팅

③ 파업

④ 보이콧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근로자 측인지 사용자 측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직장폐쇄만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에 맞서는 행위를 말한다.

핵심 구분

파업·피케팅·보이콧은 근로자 측이 사용하는 쟁의 수단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맞서 사업장 출입이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예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들고 있으며, 직장폐쇄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직장폐쇄는 사용자 측이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나머지 세 가지와 주체가 다르다.
② X — 피케팅은 근로자 측이 사업장 주변 등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파업 참여나 협조를 호소하는 쟁의 수단이다. 틀린 판단은 피케팅의 주체가 나머지 근로자 측 행위와 다르다고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피케팅도 근로자 측 행위이다.
③ X —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근로자 측 쟁의행위이다. 틀린 판단은 파업의 주체가 나머지 근로자 측 행위와 다르다고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파업도 근로자 측 행위이다.
④ X — 보이콧은 근로자 측이 사용자 측 상품의 구매 거부 등을 통해 압박하는 쟁의 수단이다. 틀린 판단은 보이콧의 주체가 나머지 근로자 측 행위와 다르다고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보이콧도 근로자 측 행위이다.

오답 포인트

쟁의행위를 모두 근로자 측 행위로 생각하면 ①을 놓치기 쉽다. 법상 쟁의행위에는 근로자 측의 행위뿐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사용자 측 행위도 포함되며, 그 대표가 직장폐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수단에서 누가 행동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사용자가 사업장을 닫는 직장폐쇄는 사용자 측이고, 근로 제공 거부·참여 호소·구매 거부로 압박하는 파업·피케팅·보이콧은 근로자 측이다.

암기 포인트

직장폐쇄는 사용자 측, 파업·피케팅·보이콧은 근로자 측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③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기본 성격과 그 안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대통령의 독립적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을 보여 주는 요소와 국회가 정부 구성·운영에 관여하는 요소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와 별도로 선출되어 행정부를 이끄는 정부 형태이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제도,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처럼 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연결되는 장치를 말한다.

핵심 구분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가지므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 동시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제도,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두고 있다. 다만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형적 대통령제라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무총리 제도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소를 함께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올바른 표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② O
대통령의 국민 직접선거와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이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총리 제도,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두 성격을 함께 나타낸 선지이다.

③ X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이나 해임건의권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일 뿐, 국회에 행정권을 나누어 준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상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므로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틀린 표현: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
올바른 표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국회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한다.

④ X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따라서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표현이 틀리다.
틀린 표현: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표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오답 포인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무총리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의원내각제로 판단하거나, 국회의 견제 권한을 행정권의 분산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대통령제 근간'과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가미'를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통령의 국민 직접선거·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보이면 대통령제적 요소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국무총리 제도·국회의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이 보이면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분류한다. 두 묶음이 함께 제시되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절충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국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중심에 국무총리·정부 법률안 제출·국회 동의와 해임건의라는 내각제적 요소를 더한 형태이다.

NoteBase

문 20.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치병에 걸린 甲은 두 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잔여 재산 10억 원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였다. 甲과 증인들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甲은 그로부터 수일 후 사망하였다.
현재 甲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는 재혼한 아내인 乙(丙의 친 생모), 丙(甲의 친 양자), 丁(甲의 어머니)이 있다.

①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丙이 甲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다.
②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④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직계비속인 丙이 있으면 직계존속인 丁은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 乙의 상속분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가 가산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이다.

핵심 구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여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유효하다. 사례의 유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상속순위에서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앞선다. 따라서 丙과 배우자 乙이 공동상속인이고 丁은 상속인이 아니다. 乙과 丙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1이므로 乙은 3/5, 丙은 2/5이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乙은 3억 원, 丙은 2억 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유언이 유효하면 전처가 10억 원 전액을 받지만, 공동상속인 乙과 丙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유류분은 3억 원이고 丙의 유류분은 2억 원이므로 丙의 유류분이 더 적다.

② X — 丁은 甲의 직계존속이지만, 선순위 직계비속인 丙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유류분권리자도 아니다.
틀린 표현: 丁은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丁은 선순위 상속인인 丙이 있으므로 甲의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X — 유언이 무효이면 乙과 丙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丁은 상속에서 제외된다. 乙과 丙의 상속 비율도 3:2이므로 같지 않다.
틀린 표현: 丁과 乙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올바른 표현: 丁은 상속받지 못하고, 乙과 丙이 각각 3/5과 2/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④ X — 유언이 무효이면 丙의 법정상속분은 2/5이므로 10억 원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틀린 표현: 丙은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올바른 표현: 丙은 4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丁도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이라고 판단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면 틀린다. ③의 '丁과 乙은 같은 비율'은 상속순위와 배우자 가산분을 동시에 무시한 표현이고, ④의 '3억 원'은 乙의 유류분 액수와 丙의 법정상속분 액수를 뒤섞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순위 상속인을 확정한 뒤 배우자 가산분을 반영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한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분에 배우자·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인 1/2을 다시 곱하고,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자체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제외되고,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1.5:1이며, 배우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NoteBase